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국 회 사 무 처
- 국 회 도 서 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2025. 11.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국회 총괄

I. 예산안 개요	1
1. 세입예산안	1
2. 세출예산안	1
II.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2
III.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3
IV.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4

국회사무처

I.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7

- 1. 세입예산안 7
- 2. 세출예산안 8

II.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0

- 1. 입법활동지원 (1031-300) 10
 - 가. 개 요 10
 - 나. 신문저작권료 증액 필요 10
- 2.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1033-302) 12
 - 가. 개 요 12
 - 나. 의원연맹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2
 - 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최 예산 반영 필요 15
- 3. 헌정회지원 (1034-301) 17
 - 가. 개 요 17
 - 나. 헌정회관 임차료 예산 적정수준 편성 필요 17
- 4.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20
 - 가. 개 요 20

나. 중장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21
5. 인사및운영지원(2031-301)	25
가. 개 요	25
나. 5급 역량평가 의무화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25
다. 마음건강센터 운영 활성화 필요	26
6.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	30
가. 개 요	30
나. 수어통역사 직접 고용 방안 검토 필요	30
7.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33
가. 개 요	33
나. 국회참관기념품 제작 예산 증액 검토 필요	33
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포상금 증액 필요	34
8. 연수활동지원(2031-306)	37
가. 개 요	37
나.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 용도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 필요	37
9. 의회경호및방호(2031-310)	39
가. 개 요	39
나. 불법촬영 탐지기기 도입 관련 예산 편성 검토 필요	39
10.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41
가. 개 요	41

나.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41
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국내여비 증액 필요	43
11. 국회청사유지및관리(2033-300)	44
가. 개 요	44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 검토 필요	44
12.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	46
가. 개 요	46
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46
13. 입법정보화(정보화)(2034-500)	50
가. 개 요	50
나. 고성연수원 예약시스템 재구축 필요	50
다. 정보시스템의 조속한 이중화 추진 필요	52
14. 국회방송운영(2036-300)	53
가. 개 요	53
나. 한국케이블TV 협회비 비목 변경 필요	53
다. 국회방송 프리랜서 8인 직접 고용 방안 검토 필요	54

국회도서관

I. 국회도서관 소관 예산안 개요 59

- 1. 세입예산안 59
- 2. 세출예산안 59
 - 가. 총 괄 59
 -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60

II. 국회도서관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62

- 1.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62
 - 가. 개 요 62
 - 나. 국회기록원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62
 - 다.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필요 65
 - 라. 세계의회도서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면밀한 기획
및 준비 필요 68
 - 마.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 증액 검토 필요 71
 - 바. 「세계의 헌법」(제4판 제3·4권) 발간 예산 확보 검토 필요
..... 73
 - 사. 국제자료교환 사업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76
 - 아. 납본기한 준수율 제고 방안 모색 필요 81
 - 자. 시험관리비 예산 적정 수준 편성 검토 필요 84

2.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87
가. 개 요	87
나. 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확보 검토 필요	87
3. 기관운영 기본경비(7018-250)	92
가. 개 요	92
나. 주택보조비(임차보증금) 집행률 제고 방안 검토 필요	92

국회예산정책처

I.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개요 99

1. 세입예산안	99
2. 세출예산안	99
가. 총괄	99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99

II.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01

1. 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	101
가. 개 요	101
나. 조사·분석 회답 기한 준수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102
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105
라.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인력운용방안 마련 ·	107
마. NABO 경제동향지 발간에 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10

국회입법조사처

I.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예산안 개요 115

- 1. 세입예산안 115
- 2. 세출예산안 115
 - 가. 총괄 115
 -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115

II.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17

- 1. 입법조사처운영관리(5031-300) 117
 - 가. 개 요 117
 - 나.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18
 - 다. 수요를 고려한 직원교육 재설계 필요 120
 - 라. 주요보고서 발간에 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22
 - 마.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126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국 회 총 괄

I.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6억 5,700만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대비 1억 3,900만원(3.1%)이 증액된 규모임.

[2026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입	4,518	4,657	139	3.1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8,009억 1,6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247억 8,100만원(3.2%)이 증액된 규모임.

[2026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776,135	800,916	24,781	3.2

Ⅱ.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6년도 세출예산안 8,009억 1,600만원을 기관별로 보면,
 국회사무처는 금년 예산 대비 3.6% 증액된 6,811억 3,900만원,
 국회도서관은 금년 예산 대비 0.9% 감액된 765억 5,600만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예산 대비 3.3% 증액된 230억 1,000만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금년 예산 대비 6.2% 증액된 202억 1,100만원임.

[2026년도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구성비 (%)
국 회 사 무 처	657,563	681,139	23,576	3.6	85.0
국 회 도 서 관	77,253	76,556	697	△0.9	9.6
국회예산정책처	22,279	23,010	731	3.3	2.9
국회입법조사처	19,040	20,211	1,171	6.2	2.5
합 계	776,135	800,916	24,781	3.2	100.0

Ⅲ.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6년도 세출예산안 8,009억 1,600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금년 예산 대비 3.5% 증액된 4,364억 6,000만원,
 기본경비는 금년 예산 대비 1.9% 증액된 366억 7,600만원,
 주요사업비는 금년 예산 대비 2.9% 증액된 3,277억 8,000만원임.

[2026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구성비 (%)	2026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421,526	54.3	436,460	54.5	14,934	3.5
기 본 경 비	35,984	4.6	36,676	4.6	692	1.9
주 요 사 업 비	318,625	41.1	327,780	40.9	9,155	2.9
합 계	776,135	100.0	800,916	100.0	24,781	3.2

IV.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7조 4,467억 5,200만원이고,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8,009억 1,600만원임. 2026년도 국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7.1% 증가한 반면,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2% 증가함.

2026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1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국회 소관 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비교]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A)	증가율 (%)	일반회계 세출예산(B)	증가율 (%)	구성비 (A/B*100)
2016	556,013	5.4	268,387,199	3.8	0.21
2017	574,269	3.3	275,010,414	2.5	0.21
2018	605,161	5.4	301,417,203	9.6	0.20
2019	640,904	5.9	331,777,015	10.1	0.19
2020	678,736	5.9	356,568,644	7.5	0.19
2021	705,318	3.9	380,850,870	6.8	0.19
2022	703,841	△0.2	421,416,034	10.7	0.17
2023	730,563	3.8	446,242,182	5.9	0.16
2024	767,653	5.1	449,526,707	0.7	0.17
2025	776,135	1.1	473,659,421	5.4	0.16
2026(안)	800,916	3.2	507,446,752	7.1	0.16

주: 1.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계 기준

2. 본예산 기준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국 회 사 무 처

I.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국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46억 5,700만원으로, 금년 세입 예산 45억 1,800만원 대비 1억 3,900만원(3.1%)이 증가함.

세입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이 17억 9,000만원, 「경상이전수입」이 12억 5,2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이 11억 3,3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이 4억 2,800만원, 「관유물매각대」가 5,400만원임.

주요 증액 내역은 「재화및용역판매수입」에서 '연수원 사용료 등'이 1억 5,600만원, 「경상이전수입」에서 '위약금 등'이 5,800만원 등임. 「재산수입」은 '건물대여료' 감소 등으로 7,200만원 감소함.

[2026년도 국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 (B)	증 감 (B-A)	%	비 고
재 산 수 입	1,862	1,790	△72	△3.9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등
경 상 이 전 수 입	1,194	1,252	58	4.9	변상금, 위약금 등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977	1,133	156	16.0	면허료및수수료,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428	428	-	-	기타잡수입
관 유 물 매 각 대	57	54	△3	△5.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합 계	4,518	4,657	139	3.1	

자료: 국회사무처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6,811억 3,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235억 7,600만원(3.6%)이 증액됨.

[2026년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657,563	681,139	23,576	3.6

자료: 국회사무처

2026년도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금년 예산 대비 3.5% 증액된 3,743억 4,200만원, 기본경비는 금년 예산 대비 1.5% 증액된 287억 7,500만원, 주요사업비는 금년 예산 대비 3.9% 증액된 2,780억 2,200만원임.

[2026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구성비 (%)	2026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361,518	55.0	374,342	55.0	12,824	3.5
기 본 경 비	28,343	4.3	28,775	4.2	432	1.5
주요사업비	267,702	40.7	278,022	40.8	10,320	3.9
합 계	657,563	100.0	681,139	100.0	23,576	3.6

자료: 국회사무처

2026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원활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국정감사및조사'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2,800만원 증액(40.2% 증)된 14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둘째, 미래연구원의 정책역량 내실화를 통한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 증액(13.4% 증)된 48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셋째, 데이터 기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및 안정적 국회 정보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900만원 증액(6.9% 증)된 44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Ⅱ.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입법활동지원 (1031-300)

가. 개 요

‘입법활동지원’은 국회의장단·국회의원·원내교섭단체 등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입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5억 8,800만원(7.3%) 증액된 52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입법활동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	%
입법활동지원	47,484	49,279	52,867	3,588	7.3

나. 신문저작권료 증액 필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뉴스저작물 통합이용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사 검색·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문저작권료 5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회의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가 대비 약 61~62%의 할인단가를 적용해왔으나, 2026년도 계약부터 뉴스저작물에 대한 적정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정상단가 적용

및 신문저작권료 예산 확보를 국회사무처에 요청하였음.

[신문저작권료 계약금액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약금액	581,000	581,000	581,000	581,000	575,000
정상단가	1,513,512				1,527,768
할인율	61.6%				62.4%

자료: 국회사무처

300개의 의원실이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계정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상단가를 적용할 경우 매체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2026년도 예산안인 5억 8,100만원 기준으로는 기존 18개 매체에서 6개 매체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임.

국회는 언론을 통해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기관이므로, 기존과 같이 18개 매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정상단가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18개 매체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15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문저작권료 9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문저작권료 필요 예산액 산출근거]

필요 예산액 15억 2,800만원
 = 6,000만원[27.5만원×라이선스 1계정×18매체×12개월]
 +14억 6,800만원[2.2만원(1계정 추가 단가)×309계정×18매체×12개월]

자료: 국회사무처

2.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1033-302)

가. 개 요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은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등 의원외교활동을 실시하는 연맹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2,500만원 증액(0.8%)된 3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	%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	2,256	3,065	3,090	25	0.8

나. 의원연맹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2025년 현재 국제국 소관 법인으로는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및 한미의원연맹 등이 있으며,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의원연맹 현황]

연맹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회원수
한일의원연맹	2016	한일 양국간 교류를 통한 이해 심화 및 친선도모	191인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1991	청소년 스카우트 활동 지원 및 세계 스카우트 의원단체와의 협력 증진	28인
한국 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1994	아동, 인구, 환경 및 사회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 및 국제적 유대강화	62인
아시아인권 의원연맹	2011	이념, 정치상황을 떠나 인권과 평화의 대의를 지키고 의회차원의 협력과 지원,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체계 설립에 기여	25인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의원연맹	2008	정당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도모	62인
한중의원연맹	2022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전 세계와 인류의 미래 발전	132인
한미의원연맹	2025	미국 상·하원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외교·안보·경제협력 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168인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라 의원연맹으로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차년도 보조금 예산 계상신청을 받아 국회사무처의 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및 의결을 받고 있음.

확정된 보조금은 「보조금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안)²⁾을 첨부한 보조금 예산 교부신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보조금 교부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음³⁾.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2) 「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한편, 「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및 「보조금 운영관리기준」에서는 연초 승인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을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다만, 각 연맹이 상황변경 및 사업의 탄력적 운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같은 사업예산의 변경을 3~4회씩 신청⁵⁾하거나 사업 변경을 통해 2배 증액⁶⁾ 또는 전액을 감액⁷⁾하는 등 당초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의원연맹별 사업계획 변경 신청 횟수]

(단위 : 회)

연맹명	2023년	2024년	2025년 09월
한일의원연맹	8	6	8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2	4	1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4	7	4
아시아인권의원연맹	2	4	1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5	5	3
한중의원연맹	6	1	4
한미의원연맹	-	-	4

주: 한미의원연맹은 2025년 설립

자료: 국회사무처

3) 분기별 보조금 교부는 전분기 사업실적보고 및 해당 분기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4) 변경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또는 의회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방문사업의 경우 30일 전까지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5)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 제21차APPCED총회 개최 관련 사업변경 4회 (2025)
한중의원연맹 - 현안협의회 참석 관련 사업변경 3회 (2025)

6)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 제12차 ICAPP 총회(2024)

7)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 제12차 ICAPP 기업협의회 및 제41차 ICAPP상임위(2024)

의원외교사업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국내외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빈번한 계획변경은 예산안의 편성·심의과정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연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최 예산 반영 필요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지원은 정당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 창립된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의 회원인 의원연맹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에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⁸⁾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행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이후 20년만에 개최될 예정으로, 2006년 총회에는 40개국, 96개 정당, 564명이 참석한 바 있음.

8) 2023년 5월에 개최 확정

[역대 ICAPP 총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개최국	날짜	국가	정당	인원
제1차	필리핀, 마닐라	2000.9.17.~20.	21		
제2차	태국, 방콕	2002.11.22.~24.	25		
제3차	중국, 북경	2004.9.3.~5.	35	81	
제4차	대한민국, 서울	2006.9.7.~10.	40	96	564
제5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2009.9.24.~26.	34	67	164
제6차	캄보디아, 프놈펜	2010.11.1.~4.		89	
제7차	아제르바이잔, 바쿠	2012.11.21.~24.		53	178
제8차	스리랑카, 콜롬보	2014.9.18.~21.	29	64	221
제9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6.9.1.~4.	35	87	262
제10차	모스크바, 러시아	2018.10.24.~27.	39	73	257
제11차	이스탄불, 튀르키예	2022.11.17.~20.	31	69	196
제12차	캄보디아, 프놈펜	2024.11.21.~24.	43	65	253
제13차(예정)	대한민국, 서울	2026.11.4.~7.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내년에 개최될 총회는 K-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대한민국 의회와 정당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므로, 총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헌정회지원 (1034-301)

가. 개 요

‘헌정회지원’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의 운영 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억 1,400만원(2.1%) 증액된 5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헌정회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헌정회지원	5,461	5,473	5,587	114	2.1

나. 헌정회관 임차료 예산 적정수준 편성 필요

동 사업은 연로회원지원금과 단체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 단체지원금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4억 8,800만원 증액된 19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주요 증액 사유는 헌정회관 신축 공사가 예정됨에 따른 임시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0개월분 3억원, 인테리어 비용 1억 6,100만원, 이사 비용 1,400만원 등 총 4억 7,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임⁹⁾.

9) 국회의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근처에 전용면적 180평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이라고 함.

그런데, 현재 헌정회관 신축 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일부 지연되어 착공시기가 202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고려하더라도 7월부터 임시 사무실을 임차하면 될 것으로 예상됨.

즉,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임차료 및 관리비가 10개월분으로 편성된 것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4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헌정회 사무실 이전 관련 예산 소요액]

(단위: 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	합계
300	161	14	475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사업 지연을 반영한 예상 일정(안)에 따르더라도, 총사업비 협의가 2025년 11월부터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단계이므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및 예산 불용(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헌정회관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헌정회관 신축 사업 예상 일정(안)]

수행 절차	예상 일정(안)
착공 및 공사 실시	'26. 11. ~
▲	
공사업체 선정	'26. 7. ~ '26. 10.
▲	
총사업비 협의	'26. 05. ~ '26. 06.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26. 03. ~ '26. 04.
▲	
실시설계	'25. 12. ~ '26. 03.
▲	
총사업비 협의	'25. 11. ~ '25. 12.
▲	
(현재)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25. 8. ~ '25. 11.

주: 2025. 10월말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4.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가. 개 요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도출을 통해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출연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5억 7,000만원(13.4%) 증액된 4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은 인건비(25억 2,400만원), 경상운영비(2억 8,000만원) 및 시설구축운영비(5,500만원)으로 구성되고,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2억 4,400만원(9.3%) 증액된 2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사업출연금(350-02)’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2,600만원(19.8%) 증액된 19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회미래연구원	4,216	4,261	4,831	570	13.4
- 기관운영출연금(350-01)	2,593	2,615	2,859	244	9.3
- 사업출연금(350-02)	1,623	1,646	1,972	326	19.8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나. 중장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은 매년 내부 연구진, 국회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자문,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차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확정함.

2025년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사업체계를 기존 ‘3개 사업부문, 9개 사업’에서 ‘5개 사업부문’으로 개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연구과제를 인구위기 대응, 미래산업, 외교안보 분야별로 정비하고, ② 기존에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기반 부문’은 인구위기대응 전략연구 부문의 ‘데이터 리서치 연구’로 변경됨.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사업체계 개편 현황]

기존(2021년~2024년)		현재(2025년~)	
사업부문	사업	사업부문	내용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인구위기대응 전략연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분석 및 사회 각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연구
	국가중장기발전전략		
	국제전략	미래산업 전략연구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제시
	국회미래의제지원		
연구기반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외교안보 전략연구	국제질서 전환과 불확실성 증대의 시기, 국가 외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합의 기반 조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한국인의 행복연구	연구기획사업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과제 기획·관리·평가 등
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지원, 보고서 발간, 홍보·연구성과 확산
	연구 성과확산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2025년 국회미래연구원 수행 연구과제 목록]

사업명	연구과제
인구대응 전략연구	데이터 리서치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방향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재설계: 정년, 임금체계, 노후 노동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이슈와 대응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
미래산업 전략연구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과 시사점
	한국 경제·산업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
	산업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방안 연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첨단전략산업 인재수급 미스매치 분석 및 인재양성체계 전환 연구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 전략 연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순환 전략
	가상융합 산업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AI와 가상융합 기반 재난재해 대응 방안
	피지컬 AI 기반 산업혁신 방안 연구
	AI 시대 대응 규제 패러다임 재구성 및 전환 연구
	R&D 예산 및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외교안보 전략연구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 외교안보 위기와 전략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
	정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
	남북관계와 한반도
	협치와 분권화를 위한 국가 시스템 개혁과제 연구
	국민, 국회의원 및 전문가 대외정책 인식조사
	주요 국가별 외교전략 연구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이에 맞추어 보고서 발간 관리도 기존 ‘1년 단위 연구 수행 및 연말 보고서 발간’에서 ‘3개월 단위 보고서 발간’으로 변경하여, 연구 결과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사업 개편은 연구진들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연구과제를 체계화하고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기존 연구기관·의정지원기관과의 차별성과 당초 기관의 설립취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확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에 ‘연구기반 부문’에서 수행하던 중장기 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적 인식에 기반하여 매년 반복하여 조사할 경우 인식 변화의 원인과 추세를 명확히 분석하기 어려워, 2026년에는 주기별·대상별 교차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과 사회구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데이터 리서치 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체계가 개편된 것이라는 설명임.

다만,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연구기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2018년 설립 이후 연구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타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중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¹⁰⁾

그러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장기 전략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장기 전략연구

10)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정원은 23명(기간제 직원 포함 시 32명)에 불과하여, 국회미래연구원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원(435명, 무기계약직 포함 시 467명)의 5.3% 수준임.

의 지속성이 낮아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중장기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기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업무개선 및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회미래연구원만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5. 인사및운영지원(2031-301)

가. 개 요

‘인사및운영지원’은 인사제도 및 채용제도 운영, 국회어린이집 위탁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억 5,300만원(3.8%) 증액된 6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사및운영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	%
인사및운영지원	5,661	6,608	6,861	253	3.8

나. 5급 역량평가 의무화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사제도운영’에는 국장급,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2024년 5월 2일 「국회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내규」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음.

[5급 공무원 역량평가 관련 국회공무원 역량평가 운영내규]

제2조의3(5급공무원의 역량의 종류와 내용) ① 「국회 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역량평가(이하 “5급공무원 역량평가”라 한다)의 평가대상 역량은 6가지이며, 그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3(5급공무원 역량평가 평가대상) 5급공무원 역량평가의 대상은 「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제2항제2호·제3호(같은 규칙 제3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진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도록 지정된 직렬의 6급공무원 및 연구사 중 희망자로 한다.

제4조(평가지기) ① 국장급·과장급 역량평가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상·하반기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다.

② 5급공무원 역량평가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6년에 5급 역량평가를 총 4회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용역비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함.

역량평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심사에서 벗어나 직무수행능력과 리더십,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써, 행정부에서는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근거규정을 2009년도에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국회도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마음건강센터 운영 활성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타 운영지원’에는 국회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일반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회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사업은 2024년 10월말 국회

마음건강센터를 설립한 후 시범운영(5,0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자가진단, 1:1 상담, 부서별 맞춤형·월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회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온라인 자가진단에 700만원, 개인별 상담에 1억 6,000만원, 전문가 특강 및 심리검사 비용에 1,200만원 등 총 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국회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소요 예산
온 라 인 자가진단	전직원 대상 전용사이트를 이용한 정신건강 1회 측정	전용 홈페이지 및 진단 DB 구축 등	2,000
		자가진단비 (정원 5,900명 × 800원)	5,000
개인별 상담 (1회기 50분) 상담인원 : 160명* (총 정원의 2.7%)	국회 마음건강센터 (상주상담사 2인 기준)	▪ 주 5일 파견 - 2인 × 12월 × 500만원 (개인별 상담 : 80명)	120,000
	협약상담센터	▪ 개인별 상담 횟수 : 400회 - 80명 × 5회 × 10만원	40,000
단체 및 특별 프로그램	▪ 전문가 특강(2회) 및 맞춤형 프로그램(2회) - 4회 × 250만원		10,000
	▪ 심리검사 비용		2,000
운영관리 비용	▪ 홍보 및 직원 예약 관리·보고 - 12월 × 20만원		2,400
부가가치세	10%		18,140
계 수 조 정			460
합 계			200,000

자료: 국회사무처

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온라인 자가진단 인원은 392명, 1:1 상담실적은 97명에 대하여 총 383건을 실시하였음.

대상인원 전체인 5,900명 대비 1:1 상담 비율(건수 기준)은 약 6.4%로서 법원행정처의 연간 상담 참여율인 13.8%¹¹⁾보다 낮은 수준임.

[국회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

기간	온라인 자가진단	1:1 상담	
		인원	건수
2024년 10월 ~ 2025년 9월	392명	97명	383건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가 본사업 1년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조한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부서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실시한 4건 모두 의정연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¹²⁾.

<부서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현황>

날 짜	내 용
4. 24.	신임관리자과정(6급→5급) 교육, 고성연수원
7. 3.	신임실무자과정(8급) 교육, 고성연수원
7. 14.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 교육, 의정관
9. 4.	입법고시 신규임용자 교육, 고성연수원

자료: 국회사무처

11) 2023년 기준

12)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11월 6일에 ‘직원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신청한 상태라고 함.

그런데, 연수원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각 부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

가. 개 요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은 국회 의정활동 홍보 및 국회 주요행사현장 취재진 구성·지원 등을 통해 언론에 대한 국회 홍보를 강화하고,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및 운영을 통하여 국회방문객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홍보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3억 9,200만원(10.8%) 증액된 40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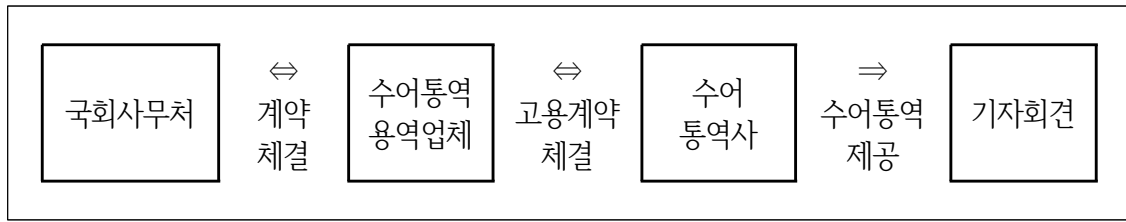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	%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3,453	3,635	4,027	392	10.8

나. 수어통역사 직접 고용 방안 검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언론 및 공보활동’에는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예산 1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은 2020년 8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수행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수어통역 제공 방식]



자료: 국회사무처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의 교체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교체가 있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전원이 교체되는 등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에 따른 고용승계 미보장과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교체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무인원	3인	3인	3인	2인	4인	6인
교체인원	-	1명 교체	교체없음	2인 승계 1인 해지	전원교체	전원교체

자료: 국회사무처

또한, 용역업체를 통한 계약방식은 국회사무처가 용역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 용역업체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수어통역사에게 보수로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수어통역사에게 실제 지급되는 보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실제로 2021년에 수어통역사에게 지급되는 분당단가는 4,185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3,650원으로 낮아졌음.

[최근 5년간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계약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역업체	케이엔씨산업	지우이엔지	코알라건설	삼심성업	힐링TV
계약단가 (분당단가)	5,072원	5,055원	4,971원	5,061원	5,051원
수어통역사 지급단가	4,185원 (82.5%)	4,140원 (81.9%)	3,830원 (77.9%)	4,300원 (85.0%)	3,650원 (72.3%)

자료: 국회사무처

한편, 수어통역 실시건수 및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수어통역사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 수어통역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³⁾.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현황]

구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9월)
수어통역 진행건수 (월평균 진행건수)	2,048건 (170.6건)	2,332건 (194.3건)	4,374건 (364.5건)	4,686건 (390.5건)	3,032건 (336.9건)
수어통역 지원시간	13,665분	16,967분	28,568분	33,361분	24,546분
수어통역사 수	3명	3명	2명	4명	6명

자료: 국회사무처

13) 대통령 비서실은 수어통역사를 별정직 6급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음.

7.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가. 개 요

‘열린국회행사지원’은 국회의 문화·개방행사 및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개최하고, 국회 참관기념품을 제작하며, 헌정자료의 보존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7억 9,300만원(54.3%) 증액된 2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열린국회행사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열린국회행사지원	1,264	1,461	2,254	793	54.3

나. 국회참관기념품 제작 예산 증액 검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회참관기념품 제작’은 국회를 참관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000만원(50%)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참관기념품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본회의장, 국회체험관 또는 어린이박물관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연간 참관기념품 배부대상 국회방문객은 약 15만명 수준임.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2025년 기준 기념품 단가(4,506원)를 적용하면, 약 33,000개 정도의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어, 방문객의 약 5분의 1 에게만 참관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

[국회 참관객 현황]

(단위: 백만원, 개, 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수량	단가 (원/개)	본회의장	국회 체험관	어린이 박물관	합계
2022	200	104	46,000	2,261	42,695	22,605	13,097	80,419
2023	200	150	119,000	1,261	95,803	42,827	19,897	160,550
2024	100	100	64,715	1,544	95,624	32,119	18,609	148,376
2025	100	68	2,500	4,506	73,352	24,803	12,730	112,910
2026	150	-	-	-	-	-	-	-

주: 2025년은 9월말 기준임.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품격 있는 참관기념품의 지급은 국회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참관기념품 제작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포상금 증액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행사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법률제정과정 체험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

해오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3,200만원(62.9%) 증액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25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어린이국회 행사를 2026년부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비목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대부분 비목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포상금 예산만 2025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비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일용임금(110-04)	24	14	31
일반수용비(210-01)	89	86	173
공공요금 및 체세(210-02)	4	4	8
임차료(210-07)	4	4	8
일반용역비(210-14)	30	20	30
국내여비(220-01)	24	24	48
사업추진비(240-01)	9	9	18
포상금(310-03)	27	25	27
합계	210	186	342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의 포상금은 우수 어린이국회연구회 및 우수 지도교사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2025년에 참여한 114개교의 어린이국회 연구회 중 22개 연구회 및 22명의 지도교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한다면, 회당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어린이들의 참여 동기 및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즉, 이 사업의 포상금은 어린이와 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핵심적 수단이므로, 개최 횟수 증가에 맞춰 포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연수활동지원(2031-306)

가. 개 요

‘연수활동지원’은 어린이·청소년 의정체험교실, 공공기관 및 지방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교육, 국회최고위과정 및 직원연구모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2억 9,800만원 (5.8%) 증액된 5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연수활동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연수활동지원	4,715	5,106	5,404	298	5.8

나.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 용도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의정인적역량강화’는 국회최고위과정, 역량강화교육 및 의정아카데미 등 국회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800만원(1.1%) 증액된 7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역량평가 교육 및 특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다가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경향이 있음.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조정사유	조정액
2024	국회 인적자원 개발 및 조직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법제실무」 제작 온라인 콘텐츠 「5급 역량평가교육」 제작 부족분 충당	26
	교육콘텐츠 개발 등 연수활동 지원	「국회 기후위기 특강」 행사운영 및 관리업체 계약 부족분 충당	15
2025	국회 인적자원 개발 및 조직역량강화	국회최고위과정 운영 용역 온라인 콘텐츠(보좌직원 신규임용과정) 제작	81
	국회 인적자원 개발 및 조직역량강화	국장급·과장급·5급역량평가교육, 국회경제특강운영용역	54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매년 일반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¹⁴⁾.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 일반용역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0	40	40	0	60	60	0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콘텐츠 제작이나 행사운영 등은 특성 상 외부업체의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기가 어려우며, 예산은 실제 수행하는 사업방식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6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수용비 일부를 일반용역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국회사무처는 일반용역비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함.

9. 의회경호및방호(2031-310)

가. 개 요

‘의회경호및방호’ 사업은 회의장 질서유지, 청사 보안 등 의회 경호·방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둔치주차장 등 국회경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1억 600만원 (△16.1%) 감액된 5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의회경호및방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의회경호및방호	4,888	6,877	5,771	△1,106	△16.1

나. 불법촬영 탐지기기 도입 관련 예산 편성 검토 필요

국회사무처는 2018년부터 국회경내 화장실 및 수유실¹⁵⁾ 등을 대상으로 경위직원들이 3인 1조를 구성하여 불법촬영 기기 탐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되면 탐지를 실시하고 있음.

15) 총 374개소(남화장실 182개소, 여화장실 183개소, 수유실 9개소)

[불법촬영 기기 탐지업무 수행 현황]

(단위: 건)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 수	1,045	602	1,108	894	1

자료: 국회사무처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지금과 같이 직원들이 불법촬영 기기 탐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실제 불법촬영 기기를 적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¹⁶⁾, 불법촬영 적발을 위해서는 상시형 탐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함.

행전안전부 청사관리본부, 서울시청 및 경찰청 등에서는 이미 상시형 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지·상업시설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상시형 탐지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함¹⁷⁾.

국회는 어느 국가기관보다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직원 및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형 탐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현재까지 불법촬영 기기 적발건수는 없음.

17) 국민체감 10선(기획재정부, 2025. 9.)

“몰카범죄 OUT”... 2026년부터 전국 공중화장실에 탐지 시스템 설치(세계일보, 2025. 9. 1.)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1500349?OutUrl=naver>

10.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가. 개 요

‘입법서비스지원활동’은 법률체계 및 법제기준 연구, 입법제안네트 워크운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입법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6,200만원(8.4%) 증액된 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입법서비스지원활동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입법서비스지원활동	728	734	796	62	8.4

나.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의원실·법제실 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안 입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7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 편성 기준이 2025년에는 연 5회였으나, 2026년에는 10회 개최를 기준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신청의원실 대비 개최 횟수 비율이 2023년에 35.0%, 2024년에 66.7%, 2025년에 41.7%(예상)로서 신청한 의원실 중 일부만 개최할 수 있어 매년 의원실의 수요가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실적]

(단위: 개, 회)

구분	2022	2023	2024	2025.9
신청의원실 수	5	20	6	12
개최 횟수	4	7	4	3
개최 비율	80.0%	35.0%	66.7%	25%(예정 2회 포함 시 41.7%)

주: 개최 희망연도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26년도에는 연 10회 개최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제6조¹⁸⁾에서는 토론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고, 그 사유 발생 전이나 그 후의 달에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에 관한 내규」 제5조(개최횟수) ① 토론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전이나 그 후의 달

2.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개최신청서의 건수를 고려하여 국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최요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2. 토론회의 개최예정일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전 90일(국회의원선거인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하여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로서 토론회 개최예정일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토론회 개최예정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경우

5.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주제인 지역현안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하여 법률안 입안·검토 등 입법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 3월부터 5월까지 약 3달간 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없으므로, 계획대로 10회 개최를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국내여비 증액 필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내여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난 4년간 국내여비 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회에 380만원, 2023년 7회에 850만원, 2024년 4회에 680만원, 2025년 3회에 390만원 등으로 평균 1회당 약 128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국내여비 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집행액	개최횟수	회당 집행액
2022	3,802	4회	951
2023	8,494	7회	1,213
2024	6,767	4회	1,692
2025	3,888	3회	1,296
합계	22,951	18회	1,275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에는 토론회를 10회 개최할 계획인데, 예년의 국내여비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국내여비 700만원은 과소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국내여비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국회청사유지및관리(2033-300)

가. 개 요

‘국회청사유지및관리’는 국회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시설물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3억 1,800만원(2.3%) 증액된 58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회청사 유지및관리	47,306	57,500	58,818	1,318	2.3

나.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 검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사유지및관리’는 매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이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또는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의 세목조정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이·전용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2억 4,600만원, 2023년에 19억 6,500만원, 2024년에는 18억 9,100만원을 각각 다른 사업(비목)으로부터 충당하여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도 10월 17일에 사무처 인건비로부터 7억 6,100만원을 이용하여 충당하였음.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으로의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세부사업	세목	조정액
2022	자체이용	인건비(사무처)	보수	140
	세목조정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일반수용비	50
	세목조정	국회청사유지및관리	관리용역비	56
	소계			246
2023	자체이용	인건비(사무처)	보수	1,809
	자체이용	인건비(사무처)	보수	156
	소계			1,965
2024	자체이용	인건비(사무처)	보수	1,891
2025	자체이용	인건비(사무처)	보수	761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이 이·전용이 발생하는 사유를 매년 단가 인상 및 사용량(회의실 이용건수, 방문객 수, 폭염일수) 증가 등에 따라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금액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5조¹⁹⁾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이용 또는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실소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2.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

가. 개 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은 정보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보안관제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며 위기 발생 시 자료유실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정보자원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5억 5,300만원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8억 9,400만원 (△48.3%) 감액된 2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32	3,920	2,026	△1,894	△48.3

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2021년 ~ 2024년간 총사업비 467억 7,900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선시공분 공사²⁰⁾ 업체와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업 착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후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20) 우선시공분 공사는 본 공사 착수에 앞서 하는 가설공사, 부지조성공사(토공사, 터파기공사 등)를 의미하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서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임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²¹⁾에 따른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25년 10월말에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준비 중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경과]

- 2021. 01. ~ 05.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21. 06. :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21. 06. ~ 08. :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21. 08. ~ 09. : 입찰안내서 보완 및 심의
 - 2021. 10. ~ 2022. 01. : 입찰공고
 - 2022. 01. ~ 05.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 2022. 06. ~ 08. : 우선시공분 공사 가격협상(결과 : 결렬)
 - 2022. 08. : 입찰방법 변경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시공 분리입찰)
 - 2022. 09. ~ 10. : 타당성재조사 심의자료 제출 및 총사업비 조정 요청(국회사무처→기획재정부)
 - 2022. 10. : 타당성재조사 시행 요청(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2022.10 ~ 2024.1. : 타당성재조사 시행(한국개발연구원)
 - 2024.1 ~ 2024. 9. : 기획재정부 - 국회사무처 총사업비 협의
 - 2024. 09. ~ 12. :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 2025. 01. ~ : 기본·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 * 진행현황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준비 중

자료: 국회사무처

그런데, 변경된 계획에 따르더라도 총사업비 협의가 10월까지 완료 되었어야 하므로, 현재 사업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상세 일정(안)]

수행 절차	기존 계획 일정	예상 일정(안)
공사실시	‘26. 1. ~ ‘27. 12. (24개월)	‘26. 10. ~ ‘28. 9. (24개월)
공사업체선정	‘26. 1. ~ ‘27. 4. (4개월)	‘26. 6. ~ ‘26. 9. (4개월)
총사업비 협의	‘25. 11. ~ ‘25. 12. (2개월)	‘26. 4. ~ ‘26. 5. (2개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25. 9. ~ ‘25. 10. (1개월)	‘26. 2. ~ ‘26. 3. (2개월)
실시설계 (총사업비협의 포함)	‘25. 7. ~ ‘25. 10. (4개월)	‘25. 11. ~ ‘26. 5. (7개월)
총사업비 협의	‘25. 7. ~ ‘25. 9. (2개월)	‘25. 9. ~ ‘25. 10. (2개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25. 6. ~ ‘25. 7. (1개월)	‘25. 7. ~ ‘25. 9. (3개월)
중간설계	‘25. 4. ~ ‘25. 6. (3개월)	‘25. 5. ~ ‘25. 7. (3개월)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5. 3. ~ ‘25. 4. (1개월)	‘25. 4. ~ ‘25. 5. (2개월)
계획설계	‘25. 1. ~ ‘25. 3. (3개월)	‘25. 1. ~ ‘25. 3. (3개월)
설계용역 착수	‘24. 12. 27.	‘25. 1. 2.

자료: 국회사무처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공사비 13억 9,700만원도 편성되어 있는데,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총사업비 협의(2개월), 실시설계 (7개월), 공사업체 선정(4개월)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2026년도 내에 착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은 정보자원의 이용활성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3. 입법정보화(정보화)(2034-500)

가. 개 요

‘입법정보화’는 입법활동지원 및 전자국회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정보기기 보급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정보화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29억 900만원(6.9%) 증액된 44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입법정보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입법정보화	34,626	42,077	44,986	2,909	6.9

나. 고성연수원 예약시스템 재구축 필요

고성연수원 예약시스템은 2018년에 구축을 완료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8년 구축 이후 대규모 기능 개선 없이 운영상 오류 발생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지관리 수준에서 일부 기능을 개선해왔음.

그러나, 예약시스템 구축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용환경 변화 및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과 관리자 대응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포인트를 자동으로 차등 부여하는 기능, 예약대기자가 2시간 내에 미결제 시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고 다음 순번의 예약대기자가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및 특정 브라우저 또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예약 및 결제 오류 개선 등을 위해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함.

고성연수원은 2023년 13,970실, 2024년 13,948실, 2025년 13,160실이 이용되고 있고, 연간 약 6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공실률 최소화, 이용자 불편 감소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예약시스템 재구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성연수원 이용 현황]

(단위: 실, 명)

연도	이용객실수	이용객
2022	13,871	47,006
2023	13,970	65,322
2024	13,948	63,037
2025	13,160	49,162

주 1) 2025년은 10월 21일 기준임.

2) 교육연수, 대외지원, 일반예약 포함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정보시스템의 조속한 이중화 추진 필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국회의 경우,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으나, 이중화가 필요한 58개의 정보시스템 중 주로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11개(19.0%)의 시스템은 부산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47개의 정보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

- 위치 : **국회부산도서관**
- 대상 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관련 시스템(11개)** 우선 구축
 - 국회홈페이지, 위원회홈페이지, 국회방송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국회사무처홈페이지, 국회영문홈페이지, 법률정보시스템, 국회메일, 입법예고시스템, 국회전자청원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사무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함.

e의안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은 국회직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비상 상황 발생 시 국회가 기능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해복구시스템의 추가적인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²⁾.

22)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24년(8억 1,000만원), 2025년(5억 7,200만원), 2026년(3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함.

14. 국회방송운영(2036-300)

가. 개 요

‘국회방송운영’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억 8,100만원(4.0%) 증액된 17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회방송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
국회방송운영	16,822	17,039	17,720	681	4.0

나. 한국케이블TV 협회비 비목 변경 필요

동 사업에서는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비” 700만원이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어 있음.

협회비 집행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케이블TV방송국과 채널사용사업자의 연합회인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의 회원사로서, 국회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채널 접근성을 향상 및 각종 저작권료 협상 등에 있어 협회 가입을 통한 협력·조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³⁾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비를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국회방송 프리랜서 8인 직접 고용 방안 검토 필요

국회사무처는 2022년에 운영한 「국회방송 운영혁신 TF」의 결정에 따라 국회방송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16인의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²⁴⁾한 바 있고, 2023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정이 인용됨에 따라 프리랜서 작가(보조작가 6인)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하여 총 22인의 프리랜서를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24년에 14인(조연출11, 뉴스보조작가3)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재 8인(CG3, 조명2, 보조작가3)은 아직 전환되지 못한 상황임²⁵⁾.

23) 기획재정부, 2025. 5.

24) 프리랜서 중 조명(2), CG(3), PD(조연출/11) 업무는 국회방송의 기능 유지에 필수 업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공무직으로 직접 채용을 추진

25) 「국회방송 운영혁신TF」 결정(22.11.7) 당시 보조작가3, 조명2, CG3 근무하였으나 이후 신규 프로그램 제작으로 프리랜서 인원이 증원(보조작가1, CG1) 되었음

[국회방송 프리랜서 및 공무원 전환 대상 현황]

구 분	연출 조연출	메인 작가	보조 작가	조명	CG	촬영	아나 운서	MC	합 계
2025년 10월 현재	6	12	4	2	4	8	2	7	45
공무원 전환 대상			3	2	3				8

자료: 국회사무처

근로자성이 높은 일부 직종 프리랜서의 공무원 전환은 국회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수적인 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해 국회방송 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8인에 대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국 회 도 서 관

I. 국회도서관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국회도서관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음.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6년도 국회도서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765억 5,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6억 9,700만원($\Delta 0.9\%$)이 감액됨.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및 단가변동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7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무요원 운영 등에 따라 기본경비 예산이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의 임차료 감액(2025년: 22억 1,000만원 → 2026년: 12억 2,400만원) 등에 따라 주요사업비 예산이 15억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 (B-A)	
				%
세출	77,253	76,556	$\Delta 697$	$\Delta 0.9$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2026년도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올해 대비 2.5% 증액된 324억 5,900만원,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1.1% 증액된 23억 9,200만원,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3.5% 감액된 417억 500만원임.

[2026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구성비 (%)	2026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31,679	41.0	32,459	42.4	780	2.5
기 본 경 비	2,367	3.1	2,392	3.1	25	1.1
주요사업비	43,207	55.9	41,705	54.5	△1,502	△3.5
합 계	77,253	100.0	76,556	100.0	△697	△0.9

주요사업비의 증감내역을 보면, 「도서관운영관리」는 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회부산도서관운영」은 4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자도서관운영」은 2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예산	2026 예산안	증 감	%	주요 증감 내역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11,764	11,969	205	1.7	
· 도서관기획및운영	1,061	1,230	169	15.9	· 기획 및 홍보자료 발간(△19) · 기타 도서관 운영경비 등(189)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 분과) 개최(180)
· 입법자료지원	626	599	△27	△4.3	· 의회자료지원 운영경비 등(△27)
· 법률정보지원	792	692	△100	△12.6	· 외국법률 번역 감수(△100)
· 도서관자료확충	5,928	5,922	△6	△0.1	· 도서관 열람자료 구입(△62) · Web DB 사용료(△100) ·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지원 (157)
·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2,130	2,094	△36	△1.7	·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53)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디지털열람실 조성(△24) · 서고 모바일 등 운영(△50)
· 국회기록물관리	1,227	1,432	205	16.7	· 국회 기록 기획전시(100) ·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기록화(66) · 전 국회의장단 구술충서 발간(31)
국회부산도서관운영 (3031-301)	2,447	2,860	413	16.9	· 자료 구입· 정리(253) · 열람공간 및 전시공간 조성(85)
전자도서관운영 (3035-500)	28,996	26,876	△2,120	△7.3	· 전자도서관 시스템(163) · 국회도서관 자료관리 업무지원시스템(104) · 전자도서관DB 구축(△990) · 국회기록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381) · 국회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178) ·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 953) ·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500) · 국회 아카이브 시스템 마스터플랜 (ISMP) 수립(162)
합 계	43,207	41,705	△1,502	△3.5	

Ⅱ. 국회도서관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가. 개 요

「도서관운영관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국회도서관의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117억 6,400만원 대비 2억 500만원(1.7%) 증액된 119억 6,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도서관운영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frac{(B-A)}{A}$
도서관운영관리	10,520	11,764	11,969	205	1.7

나. 국회기록원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이 2025. 10. 1. 공포되어 2025. 12. 2. 시행될 예정이고, 국회기록원의 조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 소속 국회기록보존소의 직무 규정을 삭제한 「국회도서관법」은 2025. 11. 11. 공포되어 2026. 1. 12. 시행될 예정임.

국회도서관은 2026년도 예산안에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예산으로 「도서관운영관리」, 「전자도서관운영」, 「도서관 인건비」, 「기관 운영 기본경비」 및 「국회기록보존소 기본경비」 등 5개 세부사업에 걸쳐 총 53억 1,500만원을 편성함.

[2026년도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 용	예산액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 국회 기록 기획전시 ○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기록화 ○ 국회 관련 의정활동 기록물 조사·발굴 및 해제 ○ 국회 중요기록물 보존·복원·활용 ○ 국회기록물 공개 분류, 기술사업 등	1,432
전자도서관운영 (3035-500)	○ 국회도서관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국회기록물DB 구축 ○ 국회기록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 국회 아카이브 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929
도서관 인건비 (7002-150)	○ 보수,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	2,877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8-250)	○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고용부담금	47
국회기록보존소 기본경비(7018-255)	○ 운영비,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30
계		5,315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국회기록원법」 및 「국회도서관법」이 시행되어 국회기록원이 설립되게 되면, 국회도서관 예산으로 편성된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예산은 신설되는 국회기록원 예산으로 이용 또는 이체되어야 하고,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국회기록보존소 정원 27명(국장급 1명, 과장급 2명, 담당급 5명, 6급이하 19명) 등은 국회기록원으로

이체되어야 함.

아울러, 국회기록원이 「국회기록원법」 등의 시행일에 즈음하여 원활하게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회기록원의 조직, 분장사무, 소속 직원의 정원 등을 정하는 「(가칭)국회기록원 직제」 등 하위규범의 제정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기록원장의 임명동의²⁶⁾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현재 국회사무처와 국회기록원의 직제, 2026년도 예산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기록원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국회기록원의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국회기록원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회기록원이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부처와 국회기록원의 조직·정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예산의 이용·이체, 국회기록보존소 정원의 이체 등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져 설립 후 국회기록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6) 국회기록원장은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됨.

다.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화보, 의정이슈, 국회도서관 콘텐츠, 국내외 도서관 동향, 국회도서관 소식 및 현황 등을 수록한 기관지인 「월간 국회도서관」을 매월 발간하여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고 국회 홈페이지 및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월간 국회도서관」 발간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5,900만원을 편성함.

[「월간 국회도서관」 발간 내역]

발간주기	발간목적	회당 발간부수	배부처
매월(연 10회)	국회도서관 기관지로서 국회도서관 관련 기사 수록	1,800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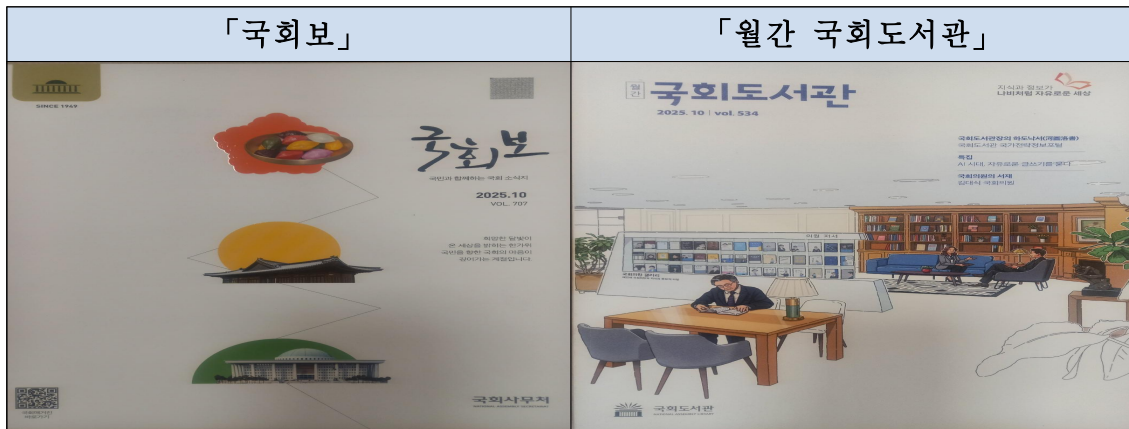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달리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지원서비스, 점자파일저장 및 점자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면낭독 전용공간, 시각장애인용 컴퓨터·스캐너, 점자프린터, 스크린 리더 등 다양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²⁷⁾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대조적으로 국회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월간 국회도서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다소 미흡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예를 들어, 국회의장단의 주요 동정, 국회의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을 수록한 「국회보」(국회사무처 발행)의 경우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삽입·표시²⁸⁾하여 시각장애인의 국회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는 데 비하여, 「월간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삽입·표시하고 있지 않음.

[「국회보」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오른쪽 상단)]



27) 참고로, 국회부산도서관은 장애인 접근성 강화하기 구입(무인대출반납기, 도서대출반납기, 멀티미디어 좌석예약 키오스크 등) 예산 8,500만원을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함.

28) 「국회보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지침」 제13조(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시각장애인의 국회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등을 삽입·표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전자도서관에 「월간 국회도서관」을 원문 구축하고 원문 음성지원(TTS, Text to Spee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월간 국회도서관」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국회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간 국회도서관」에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음성지원 서비스 연결 QR코드²⁹⁾ 등을 삽입·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9) 아울러, 국회도서관은 인쇄본을 통해서도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간 국회도서관」 표지에 국회전자도서관의 음성지원 서비스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표시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힘.

라. 세계의회도서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면밀한 기획 및 준비 필요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³⁰⁾의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됨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개최국의 의회도서관으로서 제40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음.

국회도서관은 제40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를 2026년 8월 중 2일 ~ 3일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국 및 참가국 의회도서관 주제 발표, 워크숍, 세미나, 만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참고로, 국회도서관은 2006. 8. 16. ~ 8. 19. 4일간 제22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를 개최³¹⁾한 적이 있는데, 20년만에 두

30)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행사 개요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국제도서관계 동향 파악과 현안문제 논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도서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 2006년 서울 개최
- 부산 벡스코 개최 예정(2026년 8월 둘째주, 5일간)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행사 추진현황 >

- 유치 및 개최방안 수립(2024년 10월 ~ 12월), 17개 지자체 대상 개최지 공모 결과 부산(벡스코) 선정(2025년 2월)
- IFLA 유치 의향 사전설문 실시에 따른 2026년 개최후보지 제출
- 유치신청서 제출(2025년 4월 15일), 실사단 현장방문(2025년 6월 ~ 7월), 최종 개최지 선정 및 발표(2025년 8월)
- 세계 100개국 이상, 2,000 ~ 3,000명 참석(예상)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유치 시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의회분과) 개최
※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의회분과)는 연 1회 WLIC가 열리는 국가의 의회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에서도 매년 국회도서관장 및 직원 2명이 참석하고 있음.

자료: 국회도서관

31) 36개국 42개 기관에서 82명이 참석하였고, 「입법정보서비스의 역할-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넘어서」를 의제로 강연, 분과회의, 워크숍, 문화시찰 등이 진행되었으며, 약 1억 4,000만원의 예

번째로 동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제40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개요]

○ 기간: 2026년 8월 중 2일 ~ 3일(미정)
○ 장소: 국회도서관
○ 규모: 40개국 100여명 참석(예상)
○ 내용: 개최국 및 참가국 의회도서관 주제 발표, 워크숍, 세미나, 만찬 등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제40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 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210-01)	30	○ 주제발표, 토론자 등 각종 사례비: 10백만원 ○ 행사 준비위원회 운영 등 기타 부대경비: 20백만원
일반용역비 (210-14)	150	○ 초청장, 홍보리플릿 등 제작비: 20백만원 ○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 방송중계시설비: 30백만원 ○ 통역 부스 및 차량 등 임차료: 40백만원 ○ 개회식 리셉션, 외빈환영 만찬 등: 50백만원 ○ 행사 운영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 10백만원
계	18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의회도서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도서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의회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³²⁾

산이 소요되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20년만에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의 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가 형식적인 행사성 총회에 그치지 않도록, 참가국 주제 발표, 워크숍, 세미나의 세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초청, 참가국(참가자) 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현장 운영 및 사무 관리 등 각 부분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32) 참고로,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2025년 5월 국회도서관 직원 4명이 IFLA 주요 4개 분과(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법률도서관 분과, 정부출판물 분과)의 신규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어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매달 ZOOM을 통하여 IFLA 의회분과회의를 실시하고 있음.

마.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 증액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은 법률 번역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법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법률의 감수를 실시하고 있음.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는 각급법원 소속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번역 주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감수자로 선정하여 감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국회도서관은 2008년 대법원과, 2025년에는 한국공법학회 및 서울지방법변호사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법원 판사, 전문변호사, 헌법학 전공 교수 등이 감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최근 5년간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액이 7,680만원으로 동일하였는데, 2025년에는 1억원이 증액되어 1억 7,680만원이 편성되었음. 1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2년부터 해당 예산액이 동일하게 편성·집행됨에 따라 미감수 물량이 매년 발생·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음.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
예산액	76,800	76,800	76,800	76,800	176,800
집행액	76,755	76,799	76,796	76,794	116,330

자료: 국회도서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외국법률 번역사업 대비 감수 실적 현황]

구 분	감수대상	감수사업	미감수	감수 비율
2021	152건 6,972면	89건 3,826면	63건 3,146면	55%
2022	145건 6,826면	83건 3,819면	62건 3,007면	56%
2023	130건 6,825면	69건 3,815면	61건 3,010면	56%
2024	129건 6,840면	62건 3,460면	67건 3,380면	51%
2025. 9.	118건 6,735면	69건 5,115면	49건 1,620면	76%
합계	674건 34,198면	372건 20,035면	302건 14,163면	59%

자료: 국회도서관

2026년도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은 1억원이 감액되어 2024년과 동일한 7,68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2025년 예산이 증액되어 외국법률 미감수 분량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추진 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누적되어 온 외국법률 미감수 분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25년과 동일하게 1억 7,68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는데 1억원이 감액되어 7,680만원만 정부안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법률 미감수 분량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수준 높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번역된 외국법률의 신뢰성·정확성·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법률 번역자료 감수료 예산을 2025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세계의 헌법」(제4판 제3·4권) 발간 예산 확보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민들이 각 나라의 정치·경제 제도를 이해하고 국회 및 학계가 헌법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헌법 전문에 대한 한글 번역문을 수록한 국내 유일·최대의 헌법 전문 집인 「세계의 헌법」을 2010년 초판을 시작으로 2013년 개정판, 2018년 제3판, 2025년 제4판 제1·2권까지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음.

특히, 2025년에 발간된 제4판 제1·2권의 경우 미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40개국의 헌법을 수록하고 있는데, 2018년 제3판 발간 이후 2025년 1월까지 23개국 헌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계 현대 헌법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함과 더불어, 유럽연합(EU)의 「유럽헌장 기본권 헌장」도 수록하여 유럽의 통합 및 유럽연합의 운영 과정에서의 헌법적 원칙의 기능·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세계의 헌법」 발간 및 배포 현황]

발간연도	수록국가	발간부수	발간예산	배 포
2010(초판)	35개국	1,000부(약 1,500면)	약 1,800만원	국회 내부 636부 국회 외부 313부
2013(개정판)	35개국	1,000부(약 1,400면)	약 2,000만원	국회 내부 515부 국회 외부 484부
2018(제3판)	40개국	1,000부(약 1,400면)	약 3,000만원	국회 내부 485부 국회 외부 413부
2025(제4판 제1·2권)	40개국	500부(약 1,400면)	약 3,000만원	국회 내부 359부 국회 외부 141부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회도서관은 2025년 발간된 제4판 제1·2권에 수록된 주요 40개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헌법 번역 수요에 대응하여, 아직 발간되지 않은 주요 협력국 14개국³³⁾의 헌법을 추가로 선정하여 제4판 제3·4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³⁴⁾

[「세계의 헌법」(제4판 제3·4권) 발간 소요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 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210-01)	50	발간비 1,800면×55원×500부= 50,000,000원
특근매식비 (210-05)	5	9,000원×5명×100일= 5,000,000원
사업추진비 (240-01)	2	자료조사 활동비 2,000,000원×1식= 2,000,000원
계	57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향후 개헌 논의 시 세계 주요국의 헌법을 수록한 「세계의 헌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 발간된 제4판 제1·2권에 이어지는 후속 간행물의 성격인 제4판 제3·4권을 발간함으로써 「세계의 헌법」 제4판을 완간한다는 측면에서 발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33)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34) 2025년 발간된 제4판 제1·2권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세계의 헌법」 발간을 위한 예산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기관운영 지원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내부 참고용으로 500부만 최소한으로 발간하였다고 설명함.

로 보임.

따라서, 「세계의 헌법」 제4판 제3·4권 발간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국제자료교환 사업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국회도서관은 각국 의회,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의회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에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국제자료교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100만원을 편성함.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국제자료교환 도서 구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책/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구입책수
2021	91	86	5	5,739
2022	91	89	2	6,288
2023	91	91	-	6,063
2024	81	80	1	5,352
2025. 9.	81	64	-	3,487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025년 9월 말 기준 47개국 182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자료교환을 하고 있음. 사업이 진행 중인 2025년을 제외하고 사업이 완료된 2021년~2024년의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국회도서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수의 경우 2021년 7,765책, 2022년 7,707책, 2023년 6,686책, 2024년 5,900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국회도서관이 외국으로 보낸 책수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420책~13,807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9,882책으로 감소³⁵⁾ 하였음. 또한,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수보다 외국으로 보낸 책수가 많은 것으로 매년 나타나고 있음.

[2020년~2024년 국제자료교환 실적]

(단위: 책/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계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수	7,765	7,707	6,686	5,900	28,058
외국으로 보낸 책수	11,420	13,807	12,087	9,882	47,196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일본·중국·호주·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자료교환 실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국회도서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수의 경우 일본·중국·미국·캐나다·독일은 2023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2023년 대비 증가한 영국·프랑스는 12책·9책에 불과하며 호주는 실적이 없음. 2024년 국회도서관이 외국으로 보낸 책수의 경우 일본·중국·미국·독일은 2023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호주(28책)·캐나다(137책)·영국(240책)·프랑스(318책)는 2023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으나 높은 수준은 아님.

35) 2024년에 예산이 1,000만원(9,100만원→8,100만원) 감액되어 구입책수가 감소(6,063책→5,352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1년~2024년 주요국 자료교환 실적]

(단위: 책/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총합계
일본	받은 책수	2,721	3,266	2,777	2,518	11,282
	보낸 책수	1,767	2,254	1,654	1,285	6,960
중국	받은 책수	1,296	1,464	1,077	957	4,794
	보낸 책수	2,077	2,136	2,228	1,606	8,047
호주	받은 책수	1	0	0	0	1
	보낸 책수	242	134	0	28	404
미국	받은 책수	863	1,154	673	111	2,801
	보낸 책수	2,959	4,144	3,186	2,779	13,068
캐나다	받은 책수	5	4	9	3	21
	보낸 책수	249	372	116	137	874
독일	받은 책수	923	316	683	424	2,346
	보낸 책수	644	616	592	507	2,359
영국	받은 책수	55	26	0	12	93
	보낸 책수	237	264	225	240	966
프랑스	받은 책수	31	23	7	9	70
	보낸 책수	168	147	316	318	949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제자료교환 협정 체결 국가 47개국 중 15개국은 2020년 ~ 2024년 한 권의 책도 국회도서관에 보내지 않았고 15개국은 같은 기간 국회도서관에 보낸 책수가 50책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회도서관에서 외국에 한 권의 책도 보내지 않은 국가는 6개국, 국회도서관에서 보낸 책수가 50책 미만인 국가는 4개국으로 나타

나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임.

[국제자료교환 협정 체결 국가 현황: 47개국]

아시아(15개국)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1개국)	호주
아메리카(4개국)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유럽(22개국)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중동(3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아프리카(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 2021년~2024년 수령(외국→한국) 실적이 없는 국가(15개국) 네팔,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 스페인,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 2021년~2024년 수령(외국→한국) 실적이 50책 이내인 국가(15개국) 몽골, 태국, 필리핀, 홍콩,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 2021년~2024년 송부(한국→외국) 실적이 없는 국가(6개국) 스리랑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 2021년~2024년 송부(한국→외국) 실적이 50책 이내인 국가(4개국) 네팔, 말레이시아,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자료교환의 기본 원칙은 기관 간 등량교환이지만 한국학·한국어 컬렉션을 유지하거나 한국인 사서가 근무하는 한국학 중점지원기관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발송하고 있고, 국제자료교환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자료수집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위하여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2024년에는 발송자료 구입 예산을 삭감(1,000만원)하였고 2024년~2025년 정기간행물 13종 2,200책의 발송을 중단하고 온라인 이용을 안내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 사업 유지 의지가 없는 3개국 4개 기관과의 국제자료교환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힘.³⁶⁾

다만, 국제자료교환 사업의 취지, 운영 방침과 국회도서관의 사업 효율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제자료교환 사업의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협정 이행 실적이 저조한 국가도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국제자료교환 협정 체결 국가별 자료교환 실적, 받은 자료의 자료적 가치, 주고받은 자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검토하여 주요 협정 체결 국가와의 협력 강화, 협정 이행 실적 부진 국가 정리 등 국제자료교환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6) 국회도서관은 2022년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7개국 11개 기관과의 사업을 중단하였음.

아. 납본기한 준수율 제고 방안 모색 필요

납본은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 제7조³⁷⁾에 따라 도서관자료³⁸⁾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부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납본받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운영관리」에 납본한 자에 대한 보상금(손실 보상금 310-01)과 납본대행자³⁹⁾에 대한 수수료(일반수용비 210-01)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납본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납본보상금	702	702	737	737	737	731	737	731	737	524
납본대행 수수료	96	94	112	102	112	109	112	110	115	78
계	798	796	849	839	849	840	849	841	852	602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 37)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38)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하는데, 편의상 크게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로 구분할 수 있음.
- 39) 일반도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한국잡지협회에서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납본기한(30일 이내) 준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7.1%에서 2025년 83.4%로 준수율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납본기한이 법정사항인 점, 납본업무에 보상금·대행수수료 등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0% 전반대의 준수율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납본기한 준수율 현황]

(단위: 책/점)

구 분		기한 내 납본 (%)	기한 후 납본 (%)	합 계
2021	일반도서	39,538 (74.7%)	13,374 (25.3%)	52,912
	정기간행물	13,574 (85.1%)	2,369 (14.9%)	15,943
	소계	53,112 (77.1%)	15,743 (22.9%)	68,855
2022	일반도서	39,972 (77.2%)	11,808 (22.8%)	51,780
	정기간행물	14,144 (87.9%)	1,951 (12.1%)	16,095
	소계	54,116 (79.7%)	13,759 (20.3%)	67,875
2023	일반도서	45,784 (79.7%)	11,634 (20.3%)	57,418
	정기간행물	13,776 (91.5%)	1,278 (8.5%)	15,054
	소계	59,560 (82.2%)	12,912 (17.8%)	72,472
2024	일반도서	44,994 (80.9%)	10,618 (19.1%)	55,612
	정기간행물	12,750 (87.6%)	1,809 (12.4%)	14,559
	소계	57,744 (82.3%)	12,427 (17.7%)	70,171
2025. 9.	일반도서	33,199 (81.7%)	7,406 (18.3%)	40,605
	정기간행물	9,360 (90.0%)	1,041 (10.0%)	10,401
	소계	42,559 (83.4%)	8,447 (16.9%)	51,006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납본을 통하여 도서관자료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납본의무자에게 납본의무 및 납본기한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신간출판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납본대상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신간자료가 납본기한 내에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⁴⁰⁾

국회도서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라는 점에서 납본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 지원과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납본기한 준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납본의무자에 대한 선제적 납본 요청 등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납본대행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납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40)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에서 국회도서관은 납본대행사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납본의무자에게 납본의무 및 납본기한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신간출판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납본대상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자료가 납본기한 내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참고로, 국회도서관은 납본 대상 출판사를 대상으로 ‘납본 안내 및 법정기일 내 납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납본 안내 및 기일 내 납본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힘[2023년 2회, 2024년 4회, 2025년 4회 예정(2회 실시)].

자. 시험관리비 예산 적정 수준 편성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운영관리」에 시험감독수당 및 출제·채점수당 지급을 위한 시험관리비를 기타운영비(210-16)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16만원을 편성함.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시험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연속으로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세목조정을 통한 증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⁴¹⁾ 특히, 2021년~2024년은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당초 예산액 대비 137.3%~354.7%)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41) 세목조정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명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코드	
2021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01	11,210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16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
2022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01	6,640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16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
2023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01	4,340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16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
2024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01	5,050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16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
2024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05	1,520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16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
2025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01	3,050	도서관운영관리 (3031-300)	210-16	채용시험 시험관리비 집행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

자료: 국회도서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시험관리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조정액(B)	조정률(B/A)	예산현액	집행액
2021	3,160	11,210	354.7%	14,370	14,370
2022	3,160	6,640	210.1%	9,800	9,800
2023	3,160	4,340	137.3%	7,500	6,750
2024	3,160	6,570	207.9%	9,730	8,180
2025. 9.	3,160	3,050	96.5%	6,210	6,21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전후로는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로 시험관리비 집행액이 증가하였고, 매년 예기치 못한 의원면직 및 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채용이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 대비 실소요가 많아 부득이 하게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면직 또는 휴직대체 등으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채용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채용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시험관리비 예산의 조정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였더라면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적은 규모의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 변경제도(전용·세목조정 등)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변경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험관리비 예산의 조정 내역과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시험관리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가. 개 요

「전자도서관운영」은 국회도서관 소장 학술자료 및 정책자료를 원문DB로 구축하고, 입법 관련 디지털 정보의 제공과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289억 9,600만원 대비 21억 2,000만원(△7.3%) 감액된 268억 7,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전자도서관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 A
전자도서관운영	27,535	28,996	26,876	△2,120	△7.3

나. 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확보 검토 필요

최근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전산망 또는 정보시스템 해킹 등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국회도서관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시도되고 있는데,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각 371건, 302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2년 79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23년 648건, 2024년 781건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2021년 이후 사이버공격 유형⁴²⁾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즉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인데, 2024년에는 전체 사이버공격 시도 건수 781건 중 654건으로, 83.7%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사이버공격 유형별 공격시도 건수]

(단위: 건)

구 분	공격시도 건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코드 감염	웹 셸	합 계
2020	105 (28.3%)	79 (21.3%)	165 (44.5%)	22 (5.9%)	371
2021	181 (59.9%)	51 (16.9%)	69 (22.8%)	1 (0.3%)	302
2022	714 (90.2%)	37 (4.7%)	40 (5.1%)	1 (0.1%)	792
2023	550 (84.9%)	38 (5.9%)	60 (9.3%)	0 (0.0%)	648
2024	654 (83.7%)	72 (9.2%)	55 (7.0%)	0 (0.0%)	781

자료: 국회도서관

42)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웹서비스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시스템 중요정보나 권한 획득 시도
 서비스 거부 공격: 특정 시간에 대상 서비스를 향하여 일제히 반복 접속을 시도하여 일반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차단
 악성코드 감염: 특정 URL 접속을 통하여 악성코드를 다운받게하여 PC를 감염시키거나 개인정보 유출
 웹셸: 웹서비스 서버에 악성코드 파일을 업로드하여 관리자 권한 획득 시도

국회도서관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17종의 정보시스템⁴³⁾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방대한 양의 학위논문·학술기사 등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안문서 등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있는 등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e-의안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국회도서관의 정보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국회도서관 이용자의 출입관리 및 자료열람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유·관리 중인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에 대한 강도 높은 보안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회 정보보호 규정」 제7조⁴⁴⁾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담반을

43)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시스템, 국회전자도서관, 도서관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국회지방의회의정보포털, 국회기록통합 관리시스템,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AI시사분석 아르고스,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시스템, 학술연구자정보공유 시스템, 국회 전자도서관 앱,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국회의원 정책자료시스템, 발언 빅데이터,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시스템, 국가전략정보포털, 독도홈페이지, Web-DB

44) 「국회 정보보호 규정」 제7조(취약점 분석·평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담당관은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대상·기간·절차·예산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취약점 분석·평가평가업무를 의뢰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성하여 소관 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의뢰하거나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⁴⁵⁾ 등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안대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도서관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이버안전센터의 기존 업무(실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위기 대응 업무 등) 부담과 취약점 분석·평가 기술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고도화된 공격 기법이나 복합적인 취약점에 대하여 심층적·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정보보호 컨설팅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전문적인 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

45)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예산	
	2024년	2025년
국회사무처	289	289
법원행정처	630	494
법무부	284	284
국가보훈부	140	140
인사혁신처	272	272
서울특별시	493	1,101

자료: 국회도서관

- 평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2억 3,100만원)⁴⁶⁾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유·관리 중인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6)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예산 2억 3,100만원이 소요됨.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예산산출 내역>

세 목	금 액	산출내역
일반연구비 (260-01)	231백만원	IT컨설팅(중급) 13.14백만원×4명×4개월×1.1=231백만원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3. 기관운영 기본경비(7018-250)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직원의 복지후생, 통신·차량관리 등 기관 운영 지원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및 기본교육 등 직장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20억 3,500만원 대비 2,500만원(1.2%) 증액된 20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frac{(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1,587	2,035	2,060	25	1.2

나. 주택보조비(임차보증금) 집행률 제고 방안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47)에 따라 국회부산도서관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부

47) 「국회부산도서관 근무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주택임차보증금 등의 지급 및 반납)

① 부산근무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부산근무공무원인 경우 중복되는 기간 동안 2인 중 1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30만원 이하의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2. 1천만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 이하의 주택보조비

② 부산근무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주택임차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산근무공무원”이라 함)에게 ①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또는 ② 1,0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 이하의 월세를 주택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음.

국회도서관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부산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주택보조비를 월세는 임차료(210-07)로,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440-00)으로 각각 편성·집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주택보조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월세는 집행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데 비하여 임차보증금은 낮은 집행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22년 및 2024년에는 임차보증금 집행률이 각각 43.3%, 45.3%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주택보조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⁴⁸⁾]

(단위: 백만원, %)

구 분	비 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	임차료(월세)	45	41	4	91.1
	무형자산(임차보증금)	150	122	28	81.3
2022	임차료(월세)	151	143	8	94.7
	무형자산(임차보증금)	150	65	85	43.3
2023	임차료(월세)	151	151	-	100.0
	무형자산(임차보증금)	150	103	47	68.7
2024	임차료(월세)	152	152	-	100.0
	무형자산(임차보증금)	150	68	82	45.3
2025. 10.	임차료(월세)	151	120	-	79.5
	무형자산(임차보증금)	150	78	-	52.0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부산근무공무원 1명당 주택보조비(상한액: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첫 부임 해인 2021년 이후 국회부산도서관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 월세 시세가 상승하면서 월세 상한액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 거주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예: 임차보증금 1,000만원→500만원)도 낮아지게 되어 임차보증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48) 임차료는 부산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2년, 연장 가능) 중 계속 지급되는데, 2021년에는 14명에게, 2022년~2024년에는 22명에게, 2025년에는 21명에게 지급됨. 임차보증금은 부산근무공무원의 부임 시 1회 지급되는데, 2021년 및 2023년에는 14명에게, 2022년 및 2024년에는 9명에게, 2025년에는 12명에게 지급됨.

[부임 부산근무공무원 및 주택보조비(임차보증금)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0.
부임 부산근무공무원 수	14명	9명	14명	9명	12명
임차보증금 1,000만원	11명	4명	7명	5명	4명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3명	5명	7명	4명	8명

자료: 국회도서관 제공자료 재구성

근무지인 국회부산도서관 인근 지역의 주택 임차보증금 및 월세 시세 변동⁴⁹⁾을 반영하여 주택보조금을 현실화한다면 주거 여건이 보다 적절히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부산근무공무원이 생활 및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예산의 집행률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⁰⁾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부산근무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금 현실화 및 주거 여건 개선 필요성, 여타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 현황 등

49)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부산도서관 인근인 부산명지 대방디엠시티 센텀오션2차(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48.75㎡가 2022년 6월에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에 계약되었는데, 2025년 9월에는 임차보증금 2,300만원, 월세 70만원에 계약되었음.

50) 다만, 국회사무처 소속 고성근무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과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에게 지급되는 주택보조금이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1,0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 이하의 월세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고성연수원 근무 공무원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주택임차보증금 등의 지급 및 반납) ①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고성근무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 이하의 주택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부부가 고성근무공무원인 경우 중복되는 기간 동안 2인 중 1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30만원 이하의 주택보조비를 지급한다.

「국회사무처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파견제도 운영지침」 제10조(지방자치단체파견수당 등의 지급 및 반납) ② 파견공무원에게는 1,000만원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보증금과 월 60만원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지침의 개정 등 주택보조금(임차보증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국회 예산정책처

I.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230억 1,0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대비 7억 3,100만원(3.3%)이 증액됨.

[202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22,279	23,010	731	3.3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202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5년 대비 3.3% 증액된 152억 5,500만원,

기본경비는 2025년 대비 4.7% 증액된 33억 7,5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5년 대비 2.1% 증액된 43억 8,000만원이 계상됨.

[202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구성비 (%)	2026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건비	14,765	66.3	15,255	66.3	490	3.3
기 본 경 비	3,225	14.5	3,375	14.7	150	4.7
주요사업비	4,289	19.3	4,380	19.0	91	2.1
합 계	22,279	100.0	23,010	100.0	731	3.3

주요사업비의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은 2025년 예산 대비 1억 3,200만원 증액된 3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② 「예산정책처 정보화」 사업은 2025년 예산 대비 4,100만원 감액된 9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정책처운영관리	3,287	3,419	132	4.0
예산정책처정보화	1,002	961	△41	△4.1
합 계	4,289	4,380	91	2.1

Ⅱ.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

가. 개 요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은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1억 3,200만원(4.0%) 증액된 34억 1,900만원임.

[2026년도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3,082	3,287	3,419	132	4.0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840	1,041	836	△205	△19.7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1,028	961	988	27	2.8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629	657	777	120	18.3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585	628	818	190	30.3

나. 조사·분석 회답 기한 준수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⁵¹⁾에 근거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하도록 하여,⁵²⁾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대한 회답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2021년~202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회답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도에서 평균 회답소요일수가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평균 회답소요일수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요구건수	964	587	650	519	631
철회건수	126	68	71	41	30
회답건수	838	519	579	478	588
평균 회답소요일수	28.5	32.2	30.0	23.2	2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52)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7조(회답의 방법 및 기한) ② 제1항에 따른 회답의 기한은 제5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30일로 하되, 회답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공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를 거쳐 회답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답 기한 내에 회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하여 회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서별로 조사·분석 회답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일수를 살펴보면, 처리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4년의 경우 조사·분석 회답에 공공기관평가과는 41.1일, 행정비용추계과는 32.3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전 연도에는 조사·분석 회답에 평균 40일 이상 소요되는 부서도 다수 있음.

[부서별 조사·분석 평균 회답소요일수 현황]

(단위: 건, 일)

부서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국	과	회답 건수	평균 처리일	회답 건수	평균 처리일	회답 건수	평균 처리일	회답 건수	평균 처리일
예산 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144	28	49	48.3	87	45.2	45	22.4
	산업예산분석과	29	33.2	20	26.7	34	26	46	24.7
	사회예산분석과	32	24.7	23	31.7	37	30.5	29	27.8
	행정예산분석과	29	31.6	31	42.1	28	46.5	37	22
	경제산업사업평가과	16	27.6	9	20.8	19	36.9	8	23.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1	31.3	19	41.1	41	32	21	22
	공공기관평가과	52	43.6	31	39.6	20	56.6	12	41.1
추계 세제 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42	25.9	7	23	11	37.2	8	16.1
	경제비용추계과	22	34.6	8	30.8	11	22.3	12	29
	사회비용추계과	56	17.7	42	27	33	31	32	25.7
	행정비용추계과	30	31.2	12	29.2	13	33.7	6	32.3
	세제분석1과	83	22.8	92	24.9	67	16.6	72	23.8
	세제분석2과	164	30.7	109	33.5	87	20.1	83	21.7
경제 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14	25.5	15	26.9	23	24	17	16.1
	거시경제분석과	11	21	16	20.9	18	15.7	10	9.5
	산업자원분석과	30	26.2	23	32.9	23	22.4	28	19.5
	인구전략분석과	33	23.6	13	20.1	26	22.8	12	2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제에 따라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일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분석 회답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2015년 직제 개정 이후 담당 업무 수행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설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분석을 요구하는 목적은 법률안 발의,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⁵³⁾ 조사·분석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사·분석 요구에 대한 회답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 담당 인력 증원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3) 「2024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직무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분야별로 예산분석·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동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예산안에 일반수용비(210-01) 2,600만원, 사업추진비(240-01) 800만원 총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2022년 이후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2022년 분과위원회 신규 설치·운영을 이유로 예산액을 1,4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같은 해부터 2024년까지의 집행률이 각각 60.3%, 53.4%, 62.1%로 매우 낮은 수준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예산액(A)	14,000	34,000	34,000	34,000	34,000
집행액(B)	16,750	20,511	18,160	21,100	15,520
B/A	119.6%	60.3%	53.4%	62.1%	4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의 경우에도 10월 현재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집행률은 45.6%로 다소 낮은 수준임.⁵⁴⁾

54)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남은 기간 중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예산 집행률을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는 설명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전체회의	2회	2회	2회	2회	2회
분과위원회	-	3회	3회	6회	2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변화하는 경제·사회 여건과 재정·경제 현안 등에 관한 적시성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라.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인력운용방안 마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79조의2⁵⁵⁾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2호⁵⁶⁾에 근거하여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법률안 등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비용추계 결과가 적기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는 의안 비용추계의 회답기한을 30일로 규정하되, 의안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10일로 하고 있음.⁵⁷⁾

2024년 의안 비용추계의 회답기한 준수율은 62.2%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는 23.7일로 전년 대비 5.9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기한 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회답의 적시

55)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6)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57)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6조(회답방법 등) ③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회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받은 의안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회답기한은 10일로 한다.

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비용추계 회답기한 준수율 및 평균 회답소요일수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지출 추계	수행건수(건)	4,334	3,468	4,470	5,651	4,968
	회답기한 준수율(%)	72.9	72.0	61.2	61.7	57.1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0.6	12.1	17.6	23.3	24.8
세수 추계	수행건수(건)	576	541	566	650	740
	회답기한 준수율(%)	74.1	62.5	74.0	66.8	76.8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7.1	25.6	19.0	27.5	20.2
합계	수행건수(건)	4,910	4,009	5,036	6,301	5,708
	회답기한 준수율(%)	73.0	70.7	62.6	62.2	59.4
	평균 회답소요일수(일)	11.4	13.9	17.8	23.7	2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더욱이,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의결하였음에도, 의안 비용추계의 회답기한 준수율과 평균 회답소요일수 모두 개선되지 않는 실정임.

상기와 같이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은 의원 발의법안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추계 회답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동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용추계 회답 건수는 2015년 1,994건에서

2024년 6,301건으로 약 3.2배가 늘어난 반면 담당 분석관은 2016년에 2명이 증원된 29명으로 동일하여, 분석관 1인당 회답 건수가 2015년 73.9건에서 2024년 217.3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임.

[비용추계 건수 및 비용추계 분석관 정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용추계 회답 건수(A)	1,994	3,020	3,407	3,179	2,779	4,645	4,910	4,009	5,036	6,301
분석관 수*(B)	27	29	29	29	29	29	29	29	29	29
분석관 1인당 회답 건수(A/B)	73.9	104.1	117.5	110.0	95.8	160.2	169.3	138.2	173.7	217.3

* 비용추계를 작성·회답하는 분석관(보)의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정원의인력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수행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NABO 경제동향지 발간에 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4개 분야별(경제, 산업, 대외경제 및 인구·고용) 경제 지표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NABO 경제동향」을 발간하기 위하여 2026년 예산안에 일반수용비(210-01)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NABO 경제동향 사업 발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발간 주기	권수
「NABO 경제동향 & 이슈」	· 국내경제·금융 동향 및 주요 현안 분석 · 주요 경제 분야별 경제지표의 동향 및 경제현안 분석	격월 발간 (6권)	20권
「NABO 산업동향 & 이슈」	· 우리나라 주력 산업,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동향과 관련 주요 산업현안 발굴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 주요국의 실물지표(경제성장률, 교역량 등) 및 금융지표(금리, 주가, 환율 등) 동향과 대외경제 및 금융 분야별 주요 현안 분석	분기별 발간 (4권)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 인구동향, 고용동향, 지속가능 발전지표 등 성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와 심층 이슈 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NABO 경제동향지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일반수용비(210-01) : 74원 × 90면 × 600부(발간부수) × 20권 = 8,000만원
* 발간규격: 4*6배판(190*260mm)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을 분야별로 취합·체계화하여 동향과 같은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사항을 적시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발간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정기간행물 발간현황을 고려할 때, 「NABO 경제동향」 발간이 일회성·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재정분야와 관련된 동향을 4종의 정기간행물로 발간해왔으나, 2025년 9월 현재 동 사업에 따른 「NABO 경제동향」을 제외한 3종은 폐간하거나 발간을 잠정 중단하고 대신 「NABO Focus」⁵⁸⁾의 발간 부수를 확대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재정 동향 관련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2025년 9월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비고
「NABO 경제동향」	· 분야별 경제지표 동향과 대외 경제 및 주요 현안 분석	격월 / 분기별	4개 분야 (경제, 산업, 대외경제, 인구·고용)로 구분하여 발간

58) 재정·경제 분야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한 발행이 가능한 정기간행물로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4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하여 작성됨

「NABO 재정동향 & 이슈」	· 재정지표 및 해외재정 동향과 주요 이슈 분석	연 2~3회	2025년 발간 중단 (NABO Focus 발간 확대)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 재정운용 실적 및 재정추계& 세제 국·내외 동향과 관련 주 요 현안 분석	분기별 (연 4회)	2024년 3분기 폐간 (NABO Focus 발간 확대)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 재정·경제 현안과 관련된 주요 통계값, 국제 비교 등 주요 사 항을 숫자와 인포그래픽 형태 로 제공	매월	2025년 8월 발간 중단 (지속 발간 여부 등 검토 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정책 수요, 유사 정기간행물의 폐간 사유, 의정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ABO 경제동향」이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국회입법조사처

I.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6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억 1,1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대비 11억 7,100만원(6.2%)이 증액됨.

[2026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 출	19,040	20,211	1,171	6.2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2026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25년도 대비 6.2% 증액된 144억 400만원,

기본경비는 2025년도 대비 4.1% 증액된 21억 3,4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7.2% 증액된 36억 7,300만원이 계상됨.

[2026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구 성 비 (%)	2026 예산안 (B)	구 성 비 (%)	증 감 (B-A)	%
인건비	13,564	71.2	14,404	71.3	840	6.2
기 본 경 비	2,049	10.8	2,134	10.6	85	4.1
주요사업비	3,427	18.0	3,673	18.2	246	7.2
합 계	19,040	100.0	20,211	100.0	1,171	6.2

주요사업비의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억 4,600만원 증액된 2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둘째, 「입법조사처정보화」 사업은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입법조사처운영관리	2,441	2,687	246	10.1
입법조사처정보화	986	986	-	-
합 계	3,427	3,673	246	7.2

Ⅱ.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입법조사처운영관리(5031-300)

가. 개 요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은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등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2억 4,600만원(10.1%) 증액된 26억 8,700만원임.

[2026년도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151	2,441	2,687	246	10.1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	349	376	386	10	2.7
총무, 기획 업무 등 기관운영	606	614	651	37	6.0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395	477	808	331	69.4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548	683	576	△107	△15.7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253	291	266	△25	8.6

나.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이·전용, 조정(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러한 예산변경제도는 기관에 예산집행의 신축성·융통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전용, 조정 및 세목조정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 부담금,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직원연수회, 신년업무보고 발표자료, 물품관리용역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산에 기반영된 사항에 대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이·전용, 조정,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연도	변경액	변경 횟수	변경 사유
2022년	64	13	• 정보화 리스료 인상에 따른 임차료 부족(3회) • 채용위원수당 부족(2회) •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입법과 정책 경비, 세미나 관련 임차료, 우편발송료, 물품관리 등 용역비 부족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 홍보영상제작, 한시임기제 채용(각 1회)

연도	변경액	변경 횟수	변경 사유
2023년	241	24	• 지방소멸간담회 예산 부족(4회) •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관련 경비, 채용위원수당 부족(각 3회) • MOU 체결을 위한 출장경비, 정보화 리스료 인상에 따른 임차료, 직원연수회 경비, 물품 구입비 부족(각 2회) • 우편발송료, 국외업무여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입법조사원 계약기간 연장, 신년업무보고 자료 작성, 한시임기제 채용(각 1회)
2024년	48.4	13	• 직원연수회 경비, 물품폐기용역 경비, 채용위원수당 부족 및 개원기념 홍보부스 운영(각 2회) •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비 부족 및 국제세미나 행사물품 및 방문기념품 제작, 신년업무보고 자료 작성(각 1회)
2025년 9월	168.3	13	• 물품폐기 등 용역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부족(각 3회) • 직원연수회 경비 부족(2) • 신년업무보고 자료 작성,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홍보비, MOU 체결을 위한 출장경비 부족(각 1회)

주) 음영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거나 예산에 기반영된 사항이고, 밑줄은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예산을 변경한 사항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매년 증액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세목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의 빈번한 변경 집행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요한 재정소요를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산의 변경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다. 수요를 고려한 직원교육 재설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 사이버자기학습, 민간외국어 수강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210-01) 1,22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5년 국회입법조사처 직원교육 운영 현황]

(단위: 천원)

과정명	교육내용	인원	예산액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	대학,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6개월 미만)	2인	8,000
사이버자기학습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 관련 과목 자유 수강(외국어 제외)	8인 (반기별 4인)	1,206
민간외국어 수강지원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학습	6인 (반기별 3인)	3,00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동 사업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부 입법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3년간 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2년 62.0%, 2023년 29.5%, 2024년 80.6%이었으며, 집행률이 낮게 집계된 연도의 경우 사업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25년의 경우 10월 현재 집행률이 10.8%에 불과하여 남은 기간에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국회입법조사처 직원교육 과정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	8,000	4,000 (50%)	8,000	- (0%)	8,000	8,000 (100%)	8,000	- (0%)
사이버자기학습	1,800	1,607 (89.3%)	1,800	1,344 (74.7%)	1,800	1,258 (69.9%)	1,206	458 (38.0%)
민간외국어 수강지원	3,000	2,326 (77.5%)	3,000	2,438 (81.3%)	3,000	1,055 (35.2%)	3,000	862 (28.7%)
계	12,800	7,933 (62.0%)	12,800	3,782 (29.5%)	12,800	10,313 (80.6%)	12,206	1,320 (10.8%)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의 불규칙한 교육수요로 인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한데, 이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⁵⁹⁾이나 동 과정을 통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단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관의 특성, 소속직원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교육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속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59)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요구하는데, 조사분석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총 33인 중 15인(45%)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라. 주요보고서 발간에 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은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하고, 전문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이슈와 논점’ 발간을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금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1억 9,900만원이 반영되었음.

[주요 보고서 발간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특징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NARS 입법·정책	기획주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심도있는 분석 및 대안 제시 (분량: 50페이지 내외)	40	40
NARS 현안분석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과제·대안 제시 (분량: 20페이지 내외)	85	85
이슈와 논점	현안에 대한 빠른 정보제공 (분량: 4페이지)	80	74
소계		205	19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현황에 따르면 보고서 발간계획 대비 발간률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연도별 발간율을 살펴보면, 2021년 90%, 2022년 79%, 2023년 80%, 2024년 73%이었고 2025년 10월 현재 발간율이 59%에 불과함.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연초 계획 대비 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NARS 입법· 정 책	31	27 (87%)	34	24 (72%)	35	23 (66%)	17	14 (82%)	16	6 (38%)
NARS 현안 분석	77	53 (69%)	61	42 (69%)	66	32 (49%)	72	33 (46%)	44	20 (45%)
이슈와 논 점	118	123 (109%)	153	129 (84%)	131	130 (99%)	171	144 (84%)	157	101 (64%)
계	226	203 (90%)	248	195 (79%)	232	185 (80%)	260	191 (73%)	217	127 (5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특히, ‘NARS 현안분석’의 경우 2021년~2024년에 발간된 보고서가 당초 계획의 70%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이후로는 발간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초 수립한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못하였음.

또한, 이들 보고서 중에서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은 정기회가 끝난 12월에 집중적으로 발간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4년에 ‘NARS 입법·정책’은 14건 중 8건(57.1%) 이, ‘NARS 현안분석’은 33건 중 12건(36.4%)이 12월에 발간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12월 발간 실적]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NARS 입법·정책	전체 발간건수	27	24	23	14
	12월 발간건수	11	12	14	8
	12월 발간비율	40.7	50	60.9	57.1
NARS 현안분석	전체 발간건수	53	42	32	33
	12월 발간건수	15	16	6	12
	12월 발간비율	28.3	38.1	18.8	36.4
이슈와 논점	전체 발간건수	123	129	130	144
	12월 발간건수	16	22	13	22
	12월 발간비율	13	17.1	10	15.3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과 같은 현안보고서에 비해 「NARS 입법·정책」과 「NARS 현안분석」은 중장기적 연구로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보고서이기 때문에 집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말에 보고서 발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작성하는 「NARS 입법·정책」과 달리 「NARS 현안분석」은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과제·대안을 제시하는 2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중 발간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시정조치사항으로 “보고서 발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연초에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발간이 연중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수행 등 보고서 발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보고서를 적기에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은 행정부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생산하는 발간물의 과학화를 위해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210-01) 94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2022년 53.5%, 2023년 50%, 2024년 42.6% 이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집행률이 31.3%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년 10월 현재 집행액 역시 40만원(4.3%)에 불과함.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예산(A)	14.4	14.4	14.4	9.4	9.4
결산(B)	4.5	7.7	7.2	4	0.4
집행률 (B/A)	31.3%	53.5%	50%	42.6%	4.3%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동 사업의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변경한 문제도 있음. 동 사업을 시작한 2019년에는 독자적 정책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21년에 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해 분석틀을 전수받는 것으로 변

경하였음. 2022년에는 사업방식을 재차 변경하여 보고서 전체에 적용되는 모델이나 분석틀 대신 보고서별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그간 진행된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기관 차원의 실증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맵 구축 및 방법론 자문 등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였음.

2025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여 전년도부터 운영하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미래 대응을 위한 직무개선 TF’에서 동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추진현황	추진실적
2019년	독자적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한 연구 추진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0년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1년	독자적 정책분석모형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외부 전문가 교육 통해 적합한 분석틀을 전수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단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2년	보고서 전체에 적용되는 모델·분석틀 개발 대신 보고서별 새로운 방법론 적용으로 선회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2023년	근거 기반의 과학적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입법 영향분석 및 조사회답업무 과학화 추진	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 개최, 직원교육 등
2024년	입법영향분석 등 분석·연구서비스 제공 고도화를 위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설치·운영	데이터맵 구축, 방법론 자문, 직원교육 등
2025년	협업 연구를 위한 데이터맵 및 조사회답의 신속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기술(RAG) 기반 구축	데이터맵 및 RAG 구축, 매뉴얼 제작

자료: 2023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동 TF는 제도설계팀, 데이터팀, 입법영향분석팀으로 분류되며, 그 중 데이터팀에서 동 사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데이터팀의 활동목적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 내에 데이터 맵과 AI 활용기술(RAG)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임.

[데이터맵 및 RAG 구축을 위한 데이터팀 활동 경과]

일시	활동내용
25. 2. 19.	• 1차 회의(RAG 활용을 위한 백터DB 구축 방안)
25. 3. 21.	• 2차 회의(AI기반 지능형 조사회답보고서 작성 플랫폼 관련 기술 검토)
25. 4. 17.	• 간담회(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의 형성 -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한 간담회)
25. 6. 18.	• 3차 회의(데이터맵 구축을 위한 외부 기관 OpenAPI 활용 방안)
25. 7. 7.	• 4차 회의(RAG를 활용한 조사회답 기초데이터 제공 방안)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사업수행방식이 계속 변경되는 것은 동 사업의 추진주체가 임시조직인 TF(Task Force)이기 때문임. 실제로 동 내역사업은 매년 TF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TF의 활동기한이 1~3년으로 단기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다음 해에서 추진주체가 바뀌었음.⁶⁰⁾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제 개정을 통한 인력 충원을 전제

60) 연도별 TF 운영 연혁 : 2018년(정책분석모델 개발과 실증분석 TF) / 2019년 ~ 2021년(정책분석모델 개발 TF) / 2022년 ~ 2023년(정책 및 실증분석 TF) / 2024년(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 2025년(미래 대응을 위한 직무개선 TF 데이터팀)

로 상기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수행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임.

동 사업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의 과학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 운영 가능한 임시조직으로 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행주체를 정규조직으로 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를 전담할 인력·조직을 확보하는 등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면밀히 검토·정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5017